

1. 총평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는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20번 문제 ③번 지문 국회의 종류는 새롭게 출제된 내용이나 해당 문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우수, 85점에서 90점까지는 보통, 8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2	개념문제	1
정책학	6	이론문제	12
조직이론	1	법령문제	4
인사행정론	3	이론+법령	2
재무행정론	4	학자문제	1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2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정책학 출제빈도가 기초이론과 조직이론 출제빈도가 낮다. 그러나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개념, 이론, 학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열네 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네 문제, 그리고

이론과 법령 혼합 문제가 2문제로 평균적인 빈도로 출제되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중상	20
중	3, 4, 7, 14, 15, 16, 18, 19.
중하	1, 2, 5, 6, 8, 9, 10, 11, 12, 13, 17

4. 당부 사항

1) 2019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문제는 20문제 중 19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주제들이다(20번 일부 지문 제외).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암기를 병행해야 한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②(틀림)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고, 효과성은 목표달성도를 의미한다.

구 분	능률성	효과성
개 념	산출/투입, 과정적 개념	목표 달성도, 결과적 개념
성 격	직접적·양적·단기적·객관적·조직 내적	간접적·질적·장기적·주관적·조직 외적
비용 개념	고려	미고려
목표 수준의 영향	없음	있음(목표 설정 수준에 따라 달라짐)
행정이론	행정관리론	발전행정론

- ①(옳음)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구 분	설 명	K. Mannheim	H. A. Simon
내용 중심	목표-수단 적합관계(목표-수단의 연쇄·계층제) → 기술적·도구적·수단적 합리성	기능적 합리성	실질적(내용적) 합리성
과정 중심	고도의 이성적 사유 과정	실질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 ③(옳음)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민주성의 종류>

(1) 대외적 민주성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즉 대응성(responsiveness)을 보장하는 행정을 말한다.

(예)시민참여, 정보공개, 업관주의, 대표관료제, 행정절차법, 행정구제제도, 행정통제 강화, 정책공동체

(2) 대내적 민주성

행정조직 내부의 민주화, 즉 조직관리의 민주화를 말한다.

(예)하의상달(참여), 민주형 리더십, 권한위임, 분권화, 탈관료제(Adhocracy), Y이론적 관리, MBO(Management By Objective), OD(Organization Development)

- ④(옳음)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성의 종류>

(1)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 같은 사람(기관)을 같이 취급함을 의미한다.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한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수평적 공평성이다. 법률 앞에서의 평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예) 정치적 평등(1인 1표), 법 앞의 평등, 의무교육, 수익자 부담원칙 등

(2)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해야 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일한 교육을 받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등록금을 적게 받거나 국민자의 병원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즉, 국민은 능력 면에서 최상층에서부터 최하층에 이르기 까지 수직적인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 상위층에 있는 국민보다 하위층에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것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관리상의 측면에서도 추구된다.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 즉, 관료를 채용할 때 국민들의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하는 것이다.

(예) 소득재분배정책, 사회보장제, 대표관료제 등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98-214. 핵심체크, pp.76-84.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 ② 업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해설] ②(틀림)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러나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수평적 형평성 저해),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옳음)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피동적(구성론적) 대표성이 능동적(역할론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옳음)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적극적 대표성은 비례적으로 구성된 관료제가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옳음)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25-529. 핵심체크, pp.234-236.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해설] ①(틀림)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합의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정책 델파이 기법은 1차적으로 반대 의견 표출을 유도한다.

②(옳음)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 합리모형은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③(옳음) A. Osborn이 제안한 브레인스토밍은 규격화되지 않은 집단토론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비판 금물, 자유분방, 편승 가능(무임승차 가능, piggy-backing,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형), 아이디어의 양 중시(질보다는 양의 원칙) 등을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④(옳음)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69-271, 265. 핵심체크, pp.107, 105.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 ② 정책실험의 수행
- ③ 협상이나 타협
- ④ 지연이나 회피

[해설] ④(틀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이다. 이에 소극적 방법은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지문 중 '④ 지연이나 회피'는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방법에 해당한다.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안>

(1) 적극적 대처 방안 :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

- ① 타 기관과의 흥정·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 통제.
- ② 의사결정을 늦추면서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충분히 획득(점증주의의 시행착오 인정).
- ③ 모형이나 이론 개발,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 같은 분석 기법 활용

(2) 소극적 대처 방안 :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방안

- ① 최소극대화(Maximin) 기준(보수적 접근) :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② 민감도분석 : 미리 산정한 생산계수와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매개변수값, 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악조건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 즉,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하여 분석.
- ④ 분기점분석 : 악조건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을 말한다.
- ⑤ 복수대안 제시 :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한다.
- ⑥ 가외성 장치 : 중첩성, 반복성, 동등잠재력 등 가외성 장치를 마련한다.
- ⑦ 한정적 합리성의 확보 - 완전한 합리성의 확보(×)/총체적 합리성의 확보(×)
- ⑧ 휴리스틱스(heuristics) 기법 : 그럴 듯한 답, 주먹구구식 탐색 - 알고리즘적 기법(×)
- ⑨ 표준화(공식화) : 인간의 변칙적·자의적 행위 예방(적극적 방안으로 볼 수도 있음)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86-287. 핵심체크, pp.112.

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③(틀림)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과다인원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행정의 외부효과로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 ①(옳음) 광역행정(regional administration)은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위해 상호 인접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 ②(옳음) 광역행정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보급 등으로 사회·경제권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국민의 생활권역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높일 필요성 때문에 등장하였다.
- ④(옳음)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재정적 격차로 인하여 주민의 부담과 편익의 향유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 간 균질화와 주민복지의 국민적 평준화를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79-780. 핵심체크, pp.363-364.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해설] ④(틀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 ①②(옳음)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발원된 제도이다. 옴부즈만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원된 제도이다(공식적 외부통제장치).
- ③(옳음)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즉,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부 소속이지만,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900-901. 핵심체크, pp.419-420, 281.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①(옳음)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다. 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를 포괄하고, 비금융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와 지방정부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 ②(틀림)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포함된다.
- ③④(틀림)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로서, 순계 개념상의 정부 예산 총괄표이다. 즉,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작성한다. 한편, 총수입 총지출은 2005년도부터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재정통계 지표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51-653. 핵심체크, p.298.

8. 로위(Lowy)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 ② 선거구 조정 정책
-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 ④ 국유지 불하 정책

[해설] ④(틀림) 로위의 정책 유형 중 국유지 불하 정책은 분배정책에 속한다.

구 분		강제성 적용 영역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모든 행위)
강제의 가능성	간접적	배분정책: 국유지 불하 정책, 보조금	구성정책: 선거구 조정, 정부 기관 신설, 공무원 보수와 연금에 관한 정책
	직접적	규제정책: 기준 이하 상품 규제, 불공정 경쟁 규제, 사기광고 규제	재분배정책: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29-230. 핵심체크, pp.89-90.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예산과정을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해설] ②(옳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예비비, 총액계상예산 등이 있다.

①(틀림)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틀림)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④(틀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부처별·분야별 지출한도를 정해진 후에 각 중앙관서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81-711. 핵심체크, pp.315-327.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해설] ④(틀림) 문재인 정부의 2차 정부 개혁(2018.6.8. 시행)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물관리 체계의 일원화)하였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①②③(옳음) ①②③은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 개혁(2017.7.26. 시행) 내용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922. 핵심체크, pp.429.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행정가, 폐쇄형, 계급제 요소와 결합된 제도이다. 이와 같이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 임용제와 결합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에 강해지며, 이로 인해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저해한다.

- ①(옳음)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 ③(옳음) 직업공무원 제도는 정치적 중립 및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근무규율이 수용되어진다.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공직의 요청에 부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 기대된다.
- ④(옳음)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는 종신고용으로 인해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승진 지망의 과열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21-524. 핵심체크, pp.233-234.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한 반면 발전행정론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회의를 계기로 대동하였다.

[해설] ②(틀림) 신행정론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치행정세이론론에 해당한다.

- ①(옳음)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한 반면, 발전행정론은 제3세계(개발도상국)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 ③(옳음) 신행정학은 능률지상주의, 전문직업주의(직업공무원제, professional-ism), 가치중립적 관리론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가치에 대한 합의, 고객에 의한 통제, 탈관료제 및 분권화를 강조한다.
- ④(옳음) 신행정론(NPA : 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68년 Waldo가 주최한 Minnowbrook 회의에 참여했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장되었던 이론이다. Marini는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신행정학을 지향하여」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48-150. 핵심체크, pp.55-56.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해설] ①(틀림)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나뉘어진다. Burns(1978)와 Bass(1985)가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을 특징으로 하며, 조직 구성원의 참여 기대가 큰 경우에 적합하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들에게 <u>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u>
영감적 리더십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u>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u>
개별적 배려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u>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u>
지적 자극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u>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u>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68-469. 핵심체크, p.209.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해설] ③(틀림)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혼합모형(혼합주사모형)을 제시하였다. Etzioni는 합리모형은 통제 지향적 집권주의에 적합하고, 점증모형은 다원적인 민주사회에 적합한 반면, 자신이 주장한 혼합주사모형은 개발도상국, 소위 '행동적 사회(Active Society)'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적모형은 Y. Dror가 제시한 것으로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통합한 일종의 규범적·치방적 모형이다.

①(옳음)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②(옳음)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비해 훨씬 실제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④(옳음)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92-302. 핵심체크, pp.114-120.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주민참여제도에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해설] ④(틀림) 2019년 6월 현재 주민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19세 이상이다.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 ①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①(옳음) 주민참여제도에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②(옳음)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옳음)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91-798. 핵심체크, pp.366-377.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지방직 9급(2019.6)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해설] ③(옳음) 문제 박스의 내용은 정책지지연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 관련 행위자들

을 신념체계(belief system)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이라는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policy learning) 및 정책변동을 중시한다.

①(틀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서로 관계없이 자신의 규칙에 따라 흘러다니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

②(틀림)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은 점증주의 시각의 한계를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점진적 변동에 따르는 안정과 급격한 변동에 따른 단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형이다.

④(틀림)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은 정책형성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면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패러다임변동으로 보았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46-349. 핵심체크, p.143.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해설] ①(틀림) 진실실험설계는 엄격한 실험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 배정을 통해 동질적으로 구성한 후 실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실험 내에서 인과관계)가 강하다. 그러나 실험 외의 상황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외적 타당도는 약해진다.

②(옳음) 내적 타당성은 실험 내에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정책(처치)과 결과 간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출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즉, 정책이 집행된 후 결과변수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변화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③(옳음)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는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허위변수나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옳음)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작위배정이 필요하다. 한편, 무작위배정이 어려울 경우,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준실험에 해당)를 하기도 한다.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측정을 한 후 유사한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짝을 지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한 후 실험집단에 실험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실시하지 않고 비교하기도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30-338. 핵심체크, pp.136-139.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해설] ③(옳음)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서 대비오차는 바로 직전의 평정 대상자와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①(틀림)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evaluation or appraisal)은 공무원의 ① 근무실적, ② 직무수행 능력, ③ 직무수행 태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종 인사행정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②(틀림)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은 자기평정법에 해당한다. 중요사건기록법(critical incident method)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기술하는 평정 방법이다.

④(틀림) 우리나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 제도가 적용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관련되며,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및 과장 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해당 연도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해 개인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성과급 및 승진 등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평가제도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73-581. 핵심체크, pp.258-263.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④(옳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경제성, 정책성,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①(틀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다.

②(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③(틀림)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한다.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조사 주체	기획재정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	사업 시행 기관
조사 방법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약, 개별 용역	사업기관이 용역기관을 선정
경제성 분석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민감도분석)	정밀·세부적인 수준에서 조사
정책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검토 대상이 아님.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검토 대상이 아님.
기술성 분석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아님(단, 정보화 사업의 경우 업무요구 부합성, 적용기술 적합성,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등 분석)	토지형질조사, 공법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종합평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조사 대상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
	제외: 공공청사, 문화재 복원, 국방,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복구, 유지보수사업 등, 재난예방사업은 상임위 동의 필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과행정학, p.750. 핵심체크, p.346.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2019.6)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해설] ③(틀림) ③(틀림) 국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현재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제1종) 등 4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

국채의 종류	발행목적
국고채권	사회복지정책 등 공공목적 수행
재정증권	일시 부족 자금 조달
외화표시 외환평형기금채권	외화자금매입, 해외부문통화관리
(제1종)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 재원조달

- ①(옳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옳음)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국채법).
- ④(옳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국가	2018년 기준(%)
한국	40.7
중국	50.5
스웨덴	39.0
독일	59.8
영국	86.9
프랑스	98.6
일본	105.8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647. 핵심체크, pp.295.